

제목: 개성공단 입주 댓글

차기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런 남북경제교류와 정치적 화합의 흐름은 계속 진행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의가 큰 것이기도 하구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말씀하신 남북국방장관급 회담같은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들이 정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군사적 평화가 담보돼야 경제경류나 사회문화교류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북한의 경제개발의욕과 남한의 對북한화해협력기조만 잘 유지해 나가도 떡을 천다고 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되지요. 통일같은 복잡한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이 두가지에만 입각해 일에 몰두하면 나중에 남북한간에 좋은 일이 있을것 같은 필(feel)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고 본질적인 접근을 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오로라님 댓글

오로라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왜 관리기구 쪽에선 반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이곳 카페를 그쪽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답변이 없는걸 보면 그쪽에서 명분이 없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페인트칠 공사는 원래 지하주차장 천장과 밀바닥에도 칠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능해 그걸 안했다는걸로 결론이 난것 같던데 그리고 그밖에 작은 칠공사(마무리 코팅을 해야할 부분을 많이 빠트렸죠-이걸 해야 때가 타지 않습니다)도 마무리가 안되었구요. 지하주차장 바닥 도색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그렇게 놔두고 칠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정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에게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생돈(하자보수비)을 들여 했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입구바닥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걸 칠 안하고 어떤걸 칠을 한대요? 이걸 저희동 동대표님에게도 직접 찾아가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관리소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건의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구요. 근데 도무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동대표회의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동대표들을 구성해 이일을 비롯해 여러가지 아파트 일을 맡겨야 합니다. 맨 돈 쓸 궁리나 하면서 CCTV 얘기나 꺼내지 진정 주민들의 가려운 구석은 긁어주지 못하는 그들이 정말 한심하고 알입니다.

제목: 산림보호에 대한 댓글...

산림의 보호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동네만 하더라도 몇해 전에 심은 잣나무가 자라 벌판에 빼곡하게 들어섰는데 해당청의 간벌이 없어서 나무사이로 온갖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산불발생요인이 내재하는 등 당국의 무성의가 도를 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간벌과 잡초제거를 한 나무는 옆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떤 산림보호노력도 결국엔 잣은 산불로 인해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제목: 삼성메모리사업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삼성 이근희 회장이 삼성메모리사업부에 따가운 질책을 가했다. 그것도 그럴것이 얼마전 반도체 공장의 정전사고도 그렇고 메모리시장의 점유구조도 그렇고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족 중에 삼성인이 있는 한사람으로서 평소예 삼성메모리를 사용해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많은 사용자이기도 해 두가지 제언을 해볼까 한다.

첫째, 삼성메모리를 용산업체 등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가뜰이나 용산 상인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성의있는 포장을 구경하지 못해서 선뜻 신제품을 구매하기가 망설여 진다는 애기다. 즉 모듈형태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형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요사이 하이닉스 메모리나 E5MEMORY등 경쟁업체들은 다 포장을 성의껏 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현재 삼성은 메모리 모듈의 A/S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장률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경험한 고장률도 상당히 높으며 그걸 찾아내기 위해 소비자들이 겪었어야할 심력낭비를 생각해 보았을때 회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만 제대로 개선시킨다면 삼성의 메모리사업을 후발업체들에게 계속 빼앗기는 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본 필자는 확신합니다. 물론 요새 이쪽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져 점점 더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의 욕구를 파고든다면 적어도 시장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목: 불법 게시물에 대한 반박

오로라님의 글을 읽고 나니 꼭 오로라를 보는듯한 신비감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사진들을 찍어놓으셨대요?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아파트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로라님께서도 예전에 회장직을 수행하셨을때 여러 어려움이

올릴 문서4.txt

많으셨지만 지금의 회장은 적어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누가되든 지금까지의 모든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현재는 불시에 밀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에서 말입니다. 이걸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어느누구도 발벗고 나서질 않더군요. 매우 손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로라님의 글에 부치고 싶은 제 의견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다 사진들을 찍어놓으셨대요?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아파트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산아파트 역대 회장님들이 회장직을 수행하셨을때 여러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지금의 회장은 적어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누가되든 지금까지의 모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거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불시에 밀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에서 말입니다. 이걸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어느누구도 발벗고 나서질 않더군요. 매우 손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져야 합니다.

제목: 뽑는 경쟁에서 키우는 경쟁으로...

'뽑는 경쟁'에서 정상적인 사회인과 기술인으로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 교육시스템은 너무나 낙후돼 있다. 오히려 직업전문학교같은 시스템을 연구해 대학교육에 학과별로 적용하는게 차라리 낫다.

제목: LCD 와이드, 과연 실속 있는가?

우리는 흔히 영화를 보기 위해서 LCD 와이드 모니터를 선택하곤 한다. 요새는 거의가 LCD가 와이드 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4:3비율의 예전 모니터는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들다. 4:3 비율의 사각모니터는 세로길이가 크기 때문에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게임 등을 할땐 오히려 더 효율성이 큰데 왜 이렇게 4:3 비율의 사각모니터를 구경하기 힘든건지 나로선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부터의 계산은 물론 일반화된 상식이긴 하지만 꼼꼼이 따져본다면...

우선 요새 나오는 대형 모니터의 대각선 길이가 22인치(대각선 길이 56cm)이니가 우선 16:10의 와이드 화면의 경우 승수를 a라 했을때 피타고라스정리에서 $(16a)^2 + (10a)^2 = 56^2(3136)cm^2$ 가 되니까 $256a^2 + 100a^2 = 3136$ 이 되므로 결국 $356a^2 = 3136$ 이 돼서 여기서 a값은 약 2.9680가 되어 면적이 16a 곱하기 10a 하여 $160a^2$ 이 되어 면적이 약 1409cm² 가 나온다.

반면 4:3 일반 사각모니터인 경우 승수를 a라 했을때 $(4a)^2 + (3a)^2 = 56^2(3136)cm^2$ 가 되니까 $16a^2 + 9a^2 = 3136$ 이 되어 결국 $25a^2 = 3136$ 이 돼서 여기서 a값은 약 11.2가 되어 면적이 4a 곱하기 3a 하여 $12a^2$ 이 되어 면적이 약 1505cm² 가 나온다.

즉 이 얘기는 다시말해 와이드를 사게 되면 같은 대각선 인치수라고 하더라도 22인치인 경우 사각모니터에 비해 약 96cm² 면적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이는 가로세로 약 9.8cm 크기의 정사각형 크기와 맞먹는 상당히 큰 면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단지 영화를 보기위해 우리들이 이 면적을 손해를 본다는 것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앞으로 4:3 비율의 사각모니터도 좀 생산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글>

근데 면적은 같은 인치수 모니터일때 와이드로 갈수록 줄어드는게 확 눈에 띄는데 그건 부정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22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를 피벗(때에 따라 세워서 쓰는것)해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구요 평소 인터넷을 할때도 와이드는 좌우가 많이 공백이 생겨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한가지 좋은건 이것저것 띄워놓고 쓸때 편리하다는것 그 매리트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 영화도 잘 안보고 인터넷과 문서, 음악을 주로 사용하고 TV는 작게해서 가끔보기 때문에 4:3도 크게 불편하진 않네요.

제목: 삼성산 뜨란채 동대표 부당함 지적 댓글

저 같은 경우는 이곳 카페주소를 아파트 홈페이지에 링크했다는 이유로 제 아이디가 탈퇴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입도 무기한 보류되고 있구요. 선의의 뜻으로 한 주민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현 동대표회장은 회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곳에서 제기하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타당한 것들이구요. 인터넷을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삼성산뜨란채 홈페이지를 운영(관리소가 운영한다고 대문에 걸어놓고는)하는 회장의 독선을 보았을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절대 우리아파트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체서명이 들어간 이상 동대표회의는 자동해체된 것이며 스스로의 부덕함을 알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 마당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물러나겠다고 발악할수록 더욱더 추해질 뿐이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이가 없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파트 가격을 살피고 가격이 올랐나를 따지기 이전에 자신은 우리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걸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썼쓰지만 저 말고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걸 알고 매우 놀라고 감사했더랬습니다. 가볍게 한마디 던지기 이전에 그 말들이 이런 분들의 수고를 폄하하는건 아닌지 심각히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분들의 수고가 지금까지 있어왔기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견지할 수 있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앞으로나 잘해 봅시다 우리.

blue님 우리아파트 사정이 혼란스러운건 인정합니다. 아마도 많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성수회장이 재임하면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사이버공동체란 공론의 장에서 마련돼야 할 최소한의 규칙(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게시판 이용자권리의 기준)이 우리 아파트엔 없었다는것, 그래서 저같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는것, 그것은 다시 blue님이 될수도 있고 우리 아파트 모든 주민이 그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것, 그래서 제기한 것이 정보통신부 미래전략본부에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마련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제 과거 게시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개인적 감정문제가 아닙니다.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이지요.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주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아파트엔 많은 분들이 지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거들 언급하지만 이런 것들은 회장의 처신이 잘못이 많고 독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없는 장기수선계획안(장기수선충당금 7배 인상안 등)을 세우고 주민동의를 받으려 했던 죄,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오류를 범한 죄, 지하주차장 바닥 도색문제 같은 심각한 사안을 제쳐두고 2~3억이란 거액으로 400대가 훨씬 넘는 CCTV장비를 설치하려고 했던 죄, 주민들의 반발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려다가 해체서명까지 맞고서는 이제와서 뻔뻔스럽게 법으로 하자며 업무방해 등을 한 죄 등... 대충 나열하자면 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파트 일에 관심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쪽 분들(관리기구)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 충분히 이야기(CCTV나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를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구요. 아이디 삭제건을 비롯해 CCTV에 관한 수정안을 건의드렸지만 그 후로 변화가 없더군요. 물론 한 오 짱님이나 관리기구 쪽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공정합니다. 단지 그 분들이 가끔 이런 아닌데 하는 말씀들을 할 때가 있지만 그냥 내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 됐나요?

제목: 용산 업체분들 자성을 바란다

한가지 용산에 계신 업체분들도 자성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개인적으로 한 12개 구매하면 불량이 한 2~3개 쯤 되는것 같은데 이거 좀 심한거 아닙니까? 얼마전에도 서버 파워를 현장에서 구매했다가 안되어 판매처에서 환불받았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매장에서 사시는 분들께 찾아오면 그냥 환불만 해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선 왔다갔다 돈낭비 시간낭비 그거 언제 보상해주신적 없잖아요? 전 택배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매장을 자주 찾는데 이런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찾아가면 늘 하는 말씀들이 부품이 불량일 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출고시 그 정도의 불량률이 나올리가 없으며 이런 명백한 소비자에 대한 가해행위입니다.

제목: 정부 인력 왜 늘어났다? 댓글

그렇다면 교원, 경찰·교정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예산을 늘려왔다면 과연 우리 교육, 경찰, 교도소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교육에 대해선 제가 무수히 얘기해서 더 얘기 안해도 잘 아실텐데 우리 경찰은 얼마나 우리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가요?

꼭보면 집회 장소에 동원되거나 언론기관 같으면 국민이 대노(大怒)할 일로 악속을 해서 찾아가도 일방적으로 보도국 직원이 만나기를 꺼려하여 왜 만나주질 않느냐 논리적으로 대들으면 그때 경찰이 와서 방송국 직원과 합세하여 국민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인원을 늘린들 그게 국민에게 봉사로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을 옥죄고 피해한 교육환경만을 증폭시킬 뿐이지요.

교도소 안의 인권에 관하여는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원을 늘리는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또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써야할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일부 행정분야에서 일손이 많이 바빠 증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민원도 비공개로 처리해 민원인이 공무원으로부터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먼저 공개민원을 공개하고 난후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민원인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난뒤 추후 증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포탈 음원 삭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댓글

한마디로 개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링크하는 것을 상업화하려는 알뜰한 심보다. 문광부도 그럴 도와주고 있고... 그들은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판매하면서 그것도 모잖라 인터넷 음악이름 태그도 막아서 상업화하려는 욕심쟁이들이다. 이런 사용자들의 인터넷 문화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상업성의 극치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그네들 말대로 그렇게 링크 막아서 남는게 뭔가? 못 먹는감 찢러나 보자는 건데 음반매출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고 욕심만 챙기려는 세상.... 참 말세로다. 죽은 아들 불알 만져봐야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식이나 잘 관리하는게 어떨지...

제목: 부녀회 해체건에 대해...

제 생각은 그럴습니다. 당분간 부녀회를 할 분이 안 계시면 그 일을 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대신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부녀회 없이 우리 아파트가 잘 운영되었고 부녀회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상 새롭게 부녀자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들기 이전까지 그렇게 운영하는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간에 구성을 요하겠지만 부녀회는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닌것 같지만 왜 오 짱 한 님들 때문에 부녀회가 해체되었다고들 난리치시나요? 그분들은 동대표회의의 잘잘못을 따지신 분들입니다. 이번 부녀회 해체건하곤 하등의 상관이 없지요. 물론 짱구짱님이 화초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공개를 요구한건 사실이지만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화초도 보면 별로 예쁘지도 않고 싸구려인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좀 인터넷에 공개하면 어떨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책임 전가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아파트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합시다.

그럼 우리 부녀회가 한 일을 짚어보죠. 꽃 심은 거랑 자기네들 말로는 부동산 가격 단속을 했다 이정도이고 가끔 하는 청소는 어디 하는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참여하는 거라 남자인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관리비내역서를 보니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내 도로 사각가드레일 같은데를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부녀회장님께 건의를 드리니 남자인 저보고 나와서 청소를 하라네요? 맨날 청소한다면서 그런데는 청소 안하고 어딜 청소한대요 하니까 버럭 화를 내며 참여를 종용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회원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데 청소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또 부동산 아파트 가격단속은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찬성하실지 몰라도 전 부정적입니다. 여러번 이 카페에서도 언급했지만 그건 근본적인 아파트값 올리기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게 제 견해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많은 입주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우리 모두가 아파트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나중에 혹 팔 때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제 값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엔 거미줄이 덕덕덕 붙어있는데 그게 수십억이 간들 그게 나중에 제 값을 받고 팔리겠습니까? 제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니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꿈님 3817님은 댓글을 다는데 있어 신중히 한번더 검토해 보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터럭이 비칩니다.

제목: 아파트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 댓글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잘못된 건 분명 비판받아야죠. 비판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더러 너 나와서 해봐라고 다그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동대표는 사정이 달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때 나와서 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무보수에선 그런 순수한 의도로 출마하는 사람이 적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당신이 원데 사람을 강퇴시키라 마라 합니까? 당신이 이성수 회장이요? 그리고 비방과 조롱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비방/조롱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댓글 달면서 추태를 부리며 비방/조롱 하지 않았소?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방장님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곳 카페를 실명으로 운영할 순 없는 건가요? 이상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웬지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같기도 한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중복아이디를 허용해서 그게 좀 어렵겠지요? _ _ _

제목: BBK 사건 기사에 대하여...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을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설립한 금융지주회사(LKe)에 이명박 씨의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다스)가 추가로 거액을 투자한 건 맞는데 그게 주가조작에 사용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이 후보의 소송에 김경준 씨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일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길 했지만 연이어 급등하는 주가에 혹해서 투자하면 소액주주들만 피해보고 결국 무너지는 주가에 주식만 휴지조각 되는거죠. 물론 이런 당사자끼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대선정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 최근 진행중인 이명박 후보-김경준씨 소송

올릴 문서4.txt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으로 도피했던 김경준씨가 곧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와 김씨가 미국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와 김씨는 모두 세 개의 민사소송에 얽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측근인 김백준씨를 내세워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씨를 상대로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와 함께 차린 엘케이이(LKe)뱅크에 이 후보가 투자한 30억원과, 이 후보가 하나은행에 돌려준 투자금 5억원을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제기된데다, 그동안 미국 법원에서 6차례나 이 후보 쪽에 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통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쪽 은진수 법률지원단장은 “김씨가 미국에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 소송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다스도 2003년 5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비비케이에 투자한 190억원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50억원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비비케이의 통장 기록에는 다스의 돈이 실제 비비케이에 투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열린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 한 검증위원은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보험 만기가 돼 각각 90억원과 60억원을 빼낸 날이 김경준씨한테 돈을 줬다는 날짜와 일치한다”며 “그러나 150억원이 다시 나와서 이상은씨의 계좌로 들어가는데, 이 돈의 행방이 입증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쪽은 “다스가 돈을 돌려받았다면 왜 소송을 걸겠느냐”고 반문했다.

비비케이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이 2004년 6월 미 연방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이 후보와 김씨는 얽혀 있다. 옵셔널캐피탈의 소액 주주들은 당시 주가조작으로 투자금을 날렸다고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김씨는 “이명박씨가 (비비케이 등의) 의사결정권자이며, 문제 발생시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했다”며 미국 법원에 이 후보도 피고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들 세 소송은 만약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이 후보의 비비케이 연루 의혹을 규명할 핵심 고리로 떠오를 수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씨 송환으로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 후보 쪽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취하하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오세경 변호사는 “(김씨의)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소송해 봐야 소용이 없다”며 “(이 후보는) 아마 미국에서의 소송을 유지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dokbul@hani.co.kr

제목: 카페 실명제...

근데 문제는 그게 완벽한 실명제가 아니란 거지요. 아이디를 실명으로 해봐야 가명을 쓰면 그만이고 이런 네이버 차원의 정책적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yoom님, 자꾸 한오짱, 한오짱 그러는데 오로라님이 위에서 말하듯이 yoom님 같은 분이 자꾸 그러니까 qhdgjs님께서 자꾸 그 분들을 싸잡아 댓글로 피해봤다며 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로라님은 별로 유치한 댓글 달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젠 이런 유치한 싸움은 주민들끼리 하지 말자구요. 정말 참견 안하고 구경만 하려다가 곁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이제 건설적인 얘기, 아파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얘기, 우리 모두를 위한 얘기들을 합시다.

물론 보이지도 않는 당사자더러 부녀회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좀 오버인건 사실입니다. lcc567님의 의견에도 상당한 동감을 하구요. 하지만 한오짱 님이나 기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곳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들에 대해 늘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비록 익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대충 누구일 거란건 서로 짐작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 분들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나서진 못해도 간접적(홈페이지에서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으로나마 동대표나 관리사무소를 견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분들 중에는 예전에 실제로 아파트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도 계시구요. 그 분들도 어찌된 일인지 그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런 카페에서 아파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인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도 동대표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아파트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분들의 뜻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생각이 드네요. 그걸 가지고 나서지 않는다고 뭐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느 주민이 나서서 아파트 발전을 위해 동대표나 관리소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오히려 고마워할 일이지요. 단지 그 정도(영향력)와 추진력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목: 인터넷 속도와 컴업그레이드와의 상관관계...

우리는 흔히 인터넷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계획하곤 한다. 물론 컴퓨터를 고사양의 CPU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당장은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하면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각 가정의 PC 단말기의 처리속도(예를 들자면 승수를 x로 하여 PC의 대역폭이 10x/second라 가정하

올릴 문서4.txt

면)를 흡수하는 대역폭이 1000x/second(초)라고 했을때 내 PC를 업그레이드를 하여 25x/second로 처리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하는 PC 갯수가 100대라고 칠때 시분할(time sharing) 원리에 의해서 동일 대수에서 더빠른 동기화가 이뤄져서 1대/1동기화당 1초(1000x/100/10x) 걸리는게 1동기화당 0.4초(1000x/100/25x) 걸리게 된다.

이 얘기는 달리말해 ISP가 동일대수의 PC에게 인터넷을 서비스한다고 했을때 사용자가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고사양으로 하여 처음에 좀 빠른 속도를 경험하다가도 업체 쪽에서 대역폭을 낮추면 예전의 인터넷 체감속도로 점점 떨어질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나 여러분이나 PC를 업그레이드한후 처음엔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전 속도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며 구형 Second PC(두번째 PC)에서는 예전 속도를 경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ISP 업체 쪽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며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용자가 무작정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용도에 맞게 충분히 PC의 부품을 고쳐 사용하면서 ISP가 종전의 대역폭으로 변함없이 서비스하는지 어떤지를 주의깊게 예의주시하는 것도 PC생활의 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다.

<덧글>

물론 PC 내부에서 동작하는 동영상재생이나 게임, 프로그램 구동속도 같은건 훨씬 빨라집니다. 근데 요사이 O/S가 지원하는 개발툴들도 컴자원(CPU 속도나 램, 하드 등)을 많이 잡아먹어서 좀 문제가 되는것도 사실이지요. 제가 오피스2007을 잠깐 보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하나 서버측이나 단말PC측에서 패치를 계속적으로 해주게 되면 양쪽에서 조건문과 처리루틴 등 프로그램크기가 커지게 되어 결국 CPU에 부담을 줘서 인터넷 속도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것도 주요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패치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일이 초보자들이 그걸 찾아내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분명한건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상의 오류를 찾아내 계속적으로 패치를 만들어낼 거란 사실입니다. 결국 그걸 설치할지 안할지는 사용자의 몫이란 얘기죠.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샌 윈도우 업데이트를 비롯해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사용자가 설치옵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는 패치(bug fix 및 기능추가)가 서버측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은 계속적으로 패치 적용된 인터넷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속도의 저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기능추가나 버그 수정 등의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페나 블로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수정 작업들이죠. 이상입니다.

제목: 다나와 관심상품 디렉토리 관리

관심상품 디렉토리 관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맨위에 있는 디렉토리가 가상견적이 들어갈 자리에 디렉토리 세개만 만들어도 버블소팅을 해야하는 식으로 디렉토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거 일부러 그러신건가요 아님 소비자 불편을 위해서 그러신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이상하게 생각되어 오늘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이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복지? 말로만...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자.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이 일을 못하며 놓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나같은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직장엔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이들은 각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며 밥한끼도 제때 못챙겨먹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이런 사람들을 취업포기자라며 자신들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는데 급급하다.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업무능력이 좋은 실력자들이 최저생활을 하며 놓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할까? 이들이 단지 평생 세금만 내고 공무원들의 녹봉을 대주기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이젠 복지 복지, 이런 식상한 얘기는 접을 때가 됐다. 차라리 평소 제기하는 민원이나 제대로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복지지출과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접어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려야하는지를 확실히 정해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의 뚜렷한 현실인식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덧글>

우리는 흔히 말한다. 집이나 땅이 있으면서 무슨 일이나? 우리집도 집이 있고 땅이 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백수처럼 놓고 있어야 한다는게 과연 경제적인가?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세금을 내라 복지지출 늘려줄게. 그래서 지금 우리집은 꾸준히 세금내고 있다. 우리 어머니

올릴 문서4.txt

아버지를 비롯해 나 돈 한푼 못벌어도 세금 잘 낸다. 허나 복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많이 달라진게 없다. 그게 문제다. 부동산에서 세금 대박터지고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정교하게 풀어가려는 노력은 공무원들이 별로 하지 않는다. 일을 안하고 놀고 있으면 재산 많아서 그런다고 치부해 버린다. 나를 비롯한 많은 비경제활동인구들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다. 그들도 재산이 많은 적든 실업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그냥 전술한 바대로 공무원들의 뇌리속에 안이한 상태로 방치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그대로 멈출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중한 능력을 사장시킨다는 얘기다.

제목: 광고나 기타 홍보는 '광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이곳 '자료게시판'은 이윤찬님의 자료실입니다. 기타 광고나 홍보는 '광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글쓰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중입니다. 물론 칼럼과 같은 규모가 아니라 간단한 게시판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이상한점, 버그같은게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010-4444-5482)

제목: 우리 뽐기니 이런말 쓰지 맙시다.

제품을 만드는 업체쪽에서도 다 품질테스트 하고나서 출고하고(물론 극히 일부 불량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든 같은돈 주고 정상적인 양품을 사려고 하는 마당에 용산유통업체 관계자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뽐기"란 말은 좀 사용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분이 나쁩니다. 이젠 우리 그런말 쓰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부득이하게 불량난 물품을 팔았을때 최대한 도로 그걸 보상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를 멀리한건 아닌지를 우선 생각해 봅시다.

<덧글>

물론 매장에선 그런 말 잘 안 쓰시죠. 하지만 이곳 다나와에서 활동하는 많은 업체분들이 그 말 쓰는 거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소비자가 그런 말을 쓴다고 하셨는데 저부터도 그런말을 쓰고 싶지가 않은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백만원 하는 제품이 이상있는데 "뽐기"라요? 저도 물건을 많이 사봤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올지 의문이군요. _ _ _

제목: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제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산업전반의 기술파급 효과도 무시하기 어려운거고 말이다.

방위산업 발전의 척도는 그 나라 국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좀 낮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산학연이 합동으로 여기에 공을 들여 나간다면 단지 강한 한국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국가 경제발전의 확대에도 매우 기여할 것이라라고 확신한다.

<덧글>

내수용으로 국방부에서 많이 구입해주면 업체 쪽에서도 경쟁이 일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대당 가격도 점차 내려가겠지요. 지금은 많이 비싸네요. <http://run.blrun.net/>

제목: 삼성산아파트 공식카페

근데 말이죠.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카페도 예전에 부녀회에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라도 활성화된 걸로 아는데요... 예전에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서 홍보하는걸 보았는데 왜 이 카페가 삼성산아파트 공식카페가 아닌거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궁금해지네요. 이성수 회장의 황포도 이해가 안되고... 누가 설명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뒤늦게 가입해서... ^^;

제목: 국정브리핑, 옴부즈맨 역할 상당부분 반영했다.

국정브리핑을 예전부터 죽 이용해왔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초기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당시 건의했을 때 반신반의했던 점들이 점차 수정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정브리핑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인 일입니까? 일방적인 정책기사전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사이트였겠지만 그런면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대부분의 기사에 댓글을 제한없이 달 수 있게 만든것 자체부터 다른 일반포털과

분명 차별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참여의 작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차기정부에선 더 잘 다듬어져 담당자들의 간단한 의견도 같이 달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칭찬은 적고 비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겸허히 받아드리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국가경제의 돌파구가 되어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가는 좋은 보약이 된다고 믿습니다.

모두들 지난 수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정브리핑이 대선이후에도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곁에 다가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제목: [바보상자] SBS 8시 뉴스, 왜 공중부양?

예전에 한참 '공중부양'에 대한 얘기가 유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23일 10시경에 방송된 8시 뉴스 말미의 지구촌 소식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사람은 한쪽 손에 두꺼운 막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걸 지지대로 다리밑을 바치고 있는 받침이 바지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공중부양이라며 기자가 소개하는데 정말 SBS 8시 뉴스 맞아 할 정도로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혹여나 무지몽매한 일부 시청자들은 속일수 있을지 몰라도 웬만한 눈썰미와 추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역시 TV란 바보상자가 맞다. TV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리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그걸 믿어버리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걸 취재했던 기자는 한국인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마술'과 같은 눈속임과학이 마치 진실인양 시청자들의 눈을 미혹하게 한 방송사들의 행태는 분명 공적 매체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 이건 농담이지만 필자가 정말로 그런 수행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그때와 같은 상황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맞닥뜨렸을때 공중부양에 모인 기가 상대방에게 떠드는 입으로 쏠려 금방 다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목: [펌] BBK 사건에 관한 신뢰성있는 기사네요...

인터넷 검색도중 발견했습니다. BBK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기쉽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박영선 "BBK, 美 법원서 김경준 단독 사기 입증안됐다"

2007년 10월 24일 (수)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방금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거 잠시 들으셨죠?
◆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네.

◇ 김규완
마프 펀드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 박영선
연결고리가 취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결고리는 이명박 후보 측이 미국에 써낸 소장 그대로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장에 보면요, LK이뱅크라는 것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LK이뱅크는 이명박 후보가 최대주주이고, 이사회 의사결정권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도록요. 그런데 LK이뱅크가 마프에 주식과 전환사채를 사도록 투자를 하는 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이명박 후보 측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연결고리가 왜 불투명한지를 한나라당에서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다른 데에서 자료를 뺐은 것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 측이 스스로 미국에 낸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장을 보면요. 소장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됩니다. 왜 소장이 변경이 되냐하면, 미국 법원에서 김경준을 사기 행각으로 보기에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니까 다시 써오라고, 소장을 변경해서 내라고 그래요. 처음엔 이명박 측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김경준이 사기행각을 벌였느냐라고 자꾸 재차 요구를 하니깐 이것을 결국 써낸 겁니다. 이것을 써낸 과정에서 결국 이명박 후보가 스스로 여기 관련된 것을 고백하시게 된 것이죠.

◇ 김규완
그러니까 추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인 마프 투자가 처음부터 이명박 후보가 다 파악해서 이뤄졌단 말씀이군요?

◆ 박영선
이사회 의사결을 거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권 결정권자가 누구냐, 정관에 보면 이명

박 후보로 돼 있거든요.

◇ 김규완

한나라당은 국내 검찰 조사에서 마프가 김경준 씨 단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원금 한 푼 못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박영선

우리나라 검찰조사 기록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검찰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는 달리요. 미국에서는 법원에 모든 기록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미국 재판에서 이명박 후보 측이 모두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이런 사기 행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한나라당은 검찰 뿐만 아니라 국내 금감원 조사에서도 이미 다 무혐의로 다 밝혀진 내용이니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 박영선

그것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규완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 박영선

사건자체가 다릅니다. BBK에 투자를 했던 심택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택이라는 회사가 이명박 후보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면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검사가 주도를 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명박 후보 측에서 심택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종결이 된 것이죠. 그렇게 끝난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건은 이것하고 다른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할 사건이 법원이 심택에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명박 후보가 BBK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증명을 하라고 심택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해결이 되었거든요. 이 사건이 해결이 됐다는 것은 심택이라는 회사가 뭔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방금 전에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박영선 의원이 증거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 박영선

증거라는 게요.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한나라당은 처음에 이 자료의 유출 경위가 의심스럽다, 검찰에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법원은 우리 나라 제도와 다르게 누구나 이 자료를 다 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됩니다. 재판자료 등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 데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뤄졌던 검찰 수사 자료의 일부가 미국법원에 첨부돼서 들어가 있고요 현재. 또 우리나라 검찰이 김경준 씨 송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왜 이 사람을 송환을 하는지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김경준을 왜 송환해야 하는지 이유서가 미국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공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가 미국 법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 발상입니다.

◇ 김규완

그리고 또 자신 있으면 국회 안에서 주장하지 말고 국회 바깥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 박영선

아니,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 김규완

공간적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국회 바깥에 나와서...

◆ 박영선

바깥에 나가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나요? 길거리에서 이야기 하나요?

◇ 김규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요. 이명박 후보 미국 측 대리인이 연장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경준 씨 귀국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박영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국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요. 제가 김경준 씨라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 되겠죠.

◇ 김규완

한나라당에서는 김경준 씨 귀국 배후에 정동영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 박영선

정말로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증거를 밝혀야죠.

◇ 김규완

정두언 의원이 곧 밝히겠다고 이 방송에 나와서...

◆ 박영선

증거를 그러면 밝혀야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한 두 번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경준 씨가 제 2의 김대업이 될 것이다, 신당에서 김대업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 박영선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한나라당 측에서는 3년 동안 귀국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와서 귀국하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재판과정을 보면요. 그동안 이명박 후보 측에서 이 재판과 관련해 즉각 즉각 대응을 안 하다가 3년 이라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경준 씨가 귀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계속 연기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귀국하지 못하도록. 귀국하지 못하도록 계속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명박 후보는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중적인 처사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 김규완

대한통합민주당 측의 정봉주 의원이 금감원에 이명박 후보 비호 세력이 있어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비호 세력이 있기는 있습니까?

◆ 박영선

금감원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제때에 한 적도 없고요.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금감원 조사를 보면, 금감원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금감원이 그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구석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규완

금감원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는데, 금감원으로서 자료 제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고요. 아마도 이것이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이 조사가 부실했느냐, 제대로 됐느냐의 이슈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 김규완

끝으로 다른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 박영선

현재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그렇군요.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확실하게 못 넘고 있는데요, 언제쯤 넘을까요?

◆ 박영선

어제 처음으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YTN 여론조사에서 20%를 넘어 썼지요.

◇ 김규완

그래도 아직 안정적으로 넘었다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박영선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정리 및 문의 :심연주 작가 (02-2650-7345)

제목: 대기오염문제와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요새 정말 차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에서 배기가스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것 같고 요새 기름값이 너무 올라 유사휘발유가 부쩍 많이 유통되어 환경이 더욱 오염되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부터가 틀립니다. 서울시와 정부당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전격적으로 신경써야할 때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유류세

올릴 문서4.txt

인하 얘기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원유가격이 오를때에 세금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허나 미래에 가서 혹여나 원유가격이 정상을 되찾게 되면 정부는 엄청난 요율의 유류세 부담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높은 기름값에 차 끌고 다니면서 일하고 돈벌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고등교육 취학을 1위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사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이 고등교육(대학포함)취학률은 1위인데 투자순위는 76위로 되어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떠나 이것을 해석하자면 취학을 1위를 만들어 낸건 순전히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밖에 볼수없는 통계다.

대학교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시험에 쫓아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지금은 고등교육 취학을 따위의 순위경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생각하고 거시적으로 투자해야할 때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공직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평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형화된 문제풀이식으로는 어떤 교육개혁도 용두사미로 실패하고야 만다. 문제를 푸는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뽑는게 목적이 아니겠는가?

또하나 나도 전문대를 나왔지만 산학간취업약정제 같은건 그당시 구경도 못했다. 지금은 그걸 하는 대학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다른데 신경쓰지말고 실업자들의 직무능력을 길러주는 직업학교운영 노하우를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국학교(대학교 포함)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걸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물론 나같은 경우도 장애로 인해 과정을 마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더 구조적원인을 찾아 보완하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듯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더욱 분발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제목: 40년 과외, 고민해도 왜 답이 없을까?

과외가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 또 정규일 박사가 지적한 '구성의 오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한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에서 사회/문화 풍토론을 왜 장기과제로 남겨놓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험문제 맞추기 경쟁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그걸 개선시켜나 가도록 노력해야하는것 아닌가요? _ _

제목: 수월성 교육이 뭐꼬? _ _

제가 보기엔 1안이나 2안이나 특목고 명칭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뿐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군요. 그 '수월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뛰어나게 앞서가는'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된 특목고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허나 그에 상응하게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준별교육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 뭐 특성화다 직업교육이다 그런 말들도 같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우수한 인재들만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사회에서가 아닌 학교에서) 좀 모자라고 일반적이기도 한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도 교육의 큰 역할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깐 모든 학생들이 기초적인 학습과 인성지도, 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탈교과서적으로 꾸미고, 고등학교과정은 중학교과정의 심화학습으로 좀더 이론과 실재를 병행해 학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선생님과 학생, 또 학생과 학생이 서로 상호소통하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법은 이미 선진국에선 보편화돼있는데 우리가 더욱 개선 발전시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수법으로 정착시키면 지금과 같은 주입식 교육은 아마도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덧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상입니다.

제목: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한 우리교육의 방향...

양적인 면을 중시했던 우리 공교육은 이젠 질적인 데로 나아가야 한다.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하려고 하는데에서 모든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계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한을 공부하고 미적분을 풀지만 언제나 그 맞추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데 학생들이 돈과 심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젠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문제들로 기본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중등교육까지 필수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준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국과 같이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학교간의 평가에 이용해 학교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핀란드처럼)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점수도 자연히 높게 나올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고등학교/대학교)에서는 이론과 실재를 심화시킨 교육을 받는 사람과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이분화해서 전자는 주제토론 및 과제발표와 같은 교수법을 개발해 일정시간 교과 과정에 배정하고 후자는 진로적성교육과 직업전문소양과정을 마련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다.

이젠 더이상 관중석에서 한사람이 일어서다고 다 일어서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선 안되고 공교육에서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평가요소에서 기이한 문제를 푸는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과외학습과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1세기 미래 한국의 망국병 과외(학원과외포함)를 순화시키고 일류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첩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과 직업,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우리모두의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제목: 교육개혁, 이제는 실천이다...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본부를 만들고 여러가지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입시/시험위주의 과외/학교교육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었다. 꼭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고 있는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에선 마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의 모든 고충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홍보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정도이고 어떤경우(청와대같은 상급기관에 대한 민원)에는 아예 답변이 없거나 매우 불성실한 답변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고위직에서부터 하위직으로 내려오는 (구조조정에 대한) 뿌리깊은 매너리즘은 아직도 우리사회 개혁을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에 교육관련 각종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구석은 긁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어느 공무원도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참여정부의 치적, 복지정책의 공과를 떠나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할 때다.

제목: TV의 이미지메이킹

TV 항상 접하는 거지만 전 별로 TV 믿고 싶지 않습니다. 반값아파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꼭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짜집기해서 보도하고 요새 보면 정말 저질뉴스가 많아서 별로 보고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냐 지자체 선거할때도 꼭 특정정당에 불리한 보도만 흘러서 피본 사람도 많았죠 아마? 그리고 뭐냐 또 인물에 대해 교묘한 각도로 이미지메이킹 하는거... 전 완전히 거기에 대해 질려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TV의 보도행태를 보면 철저하게 앵글화된 영상과 편집들을 가지고 지극히 평범한 영상들과 혼합하여 시청자들의 반응을 무디게 한 뒤 여론을 재단하려 하지요.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제목: 대기오염실태 신고합니다...

제가 오늘 삼성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번째(smog3.jpg)는 북한산이 보이는 사진인데 꼭대기만 보이고 밑은 검은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두번째(smog2.jpg) 사진은 확연히 대기오염층이 드리워져 있는게 보입니다.

아파트들이 넘쳐나고 덩달아 차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대기오염관리에도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02-6321-4103)가 발족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오늘 그쪽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전화받으시는 분이 서울의 대기오염이 점차개선되고 있다면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보기엔 오늘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았을때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습시다.

사진 두장을 첨부하여 대기오염실태를 신고하오니 담당자님께서서는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음으로써 서둘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달곰 4마리 방사

들리는 얘기로 반달곰을 방사해도 자연적응을 못해 기사하거나 수렵꾼들에 의해 밧 등으로 인해 위태로운 환경에 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글썄요...

제목: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자체 SW 개발

초고가의 장비를 운용하는 S/W인 만큼 한치의 버그도 없는 완벽한 완성도를 이뤄내야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들을 꼭 보면 생각치 못한 버그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목: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지만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하나로 묶이고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기사의 내용처럼 일관성있는 정책의 흐름,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려면 더많은 고민과 투자,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직업교육을 받아본 사람중에 하나로서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을 해보자면 단시간내에 너무 많은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생들의 부담이 크고 특히나 위기관리체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극도의 스트레스에도 잘 견뎌낼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은 일부 취약층에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배출한 숙련된 직업학교 훈련생들의 사회/경제적 생산유발효과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빛을 발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목: 아이언키드

가끔 어린이 채널을 보면서 3차원 그래픽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언키드"였고 그게 국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매우 놀랐다. 아래에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둘 있다. 함 읽어보세요.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장족의 발전이 있었네요. 요새 케이블의 어린이채널 21번인가 22번에서 밤에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함 보세요. 어제 방영됐던 부분은 정말 뛰어나던대요?

제목: 교육개혁, 이견조정이 관건이다.

꼭 보면 어떻게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분열의 씨앗 때문에, 또 기존의 제도권을 고집하며 손쉽게 안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학교 공직계의 개혁노력이 더디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저와 같은 국민들의 바램을 하나씩 반영하려고 노력할 때 교육개혁의 씨알은 조금씩 먹히게 될 것입니다.

제목: 개인파산자들, 우리사회에서 생겨서는 안될일...

다 좋은데 이 뉴스의 제목이 좀 그럴네요. 개인파산 신청자수 증가가 "굿뉴스"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자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개종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차명계좌를 이용, 재산을 빼돌린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건전한 신용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국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런제도를 운용할때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내돈으로 경영을 해 나가고 혹여나 빚을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 이외의 정신적 가치에 있어서 우리사회는 서로 신뢰가 빈약해졌지만 적어도 돈과 같은 재화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한 신뢰를 쌓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서로(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두가 사는 우리사회의 안정감으로 귀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목: [펌]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길지만 함 읽어보세요...

국정브리핑에서 퍼온 기사인데 내용이 참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길지만 후반부까지 잘 읽어보세요. 물론 언론에 대한 질타(취재선진화방안 등), 경제성적 표에 대한 자평, 민생악화와 양극화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긴 하지만 그런대로 대통령의 솔직하고 훌륭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사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의다는 아니지만 많은부분을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기성언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부분과 말미의 "남겨진 이야기"는 저도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사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강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 어느 쪽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개 예측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지요.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쪽에 대해 주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야기가 꼭 막혔지만 억지사지로 풀어내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가지 선언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해놓고, 자주성이 없는 것 아니냐. 특구 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하던 개성공단이나 잘 마무리 하고 다음에 생각해 보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가 꼭 막혔습니다.

워 하러 오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오라 해놓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자는 것은 아닐텐데. 그러다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얘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수행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개혁·개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 억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 오래 얘기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NLL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과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NLL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문제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 위에 평화·경제협력 합의를 해서 일정한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썩 먹고 알 먹는 좋은 사업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그 다음 평화선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9·19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9선언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선언 이행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발언은 해 놓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 다음 정부하고 노선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연한 정치적 트집입니다. 그 주장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주요사업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민자당이 집권했던 88년도 7.7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까지,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한나라당에겐 없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겐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남북 간 제도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 차이는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 주는 것이 신뢰지요.

[top]

■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당선되고 보니까 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오고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 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해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주 힘들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한 폭격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국과 경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폭,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폭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북핵문제로 경제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해서 투자자 단체들도 찾아갔지요.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한국에 안보불안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핵 괜찮냐. 남북관계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고 ‘한미 관계 괜찮냐. 한미 동맹 괜찮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북핵문제를 자꾸 한미 간 갈등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주둔군 사령부 먼저 방문해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정상적인지? 그러나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미 간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제일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핵문제가 터졌을 때 국내외에서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습니까.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남북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미국과 상당히 많은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단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6자회담이 만들어졌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이 있다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동영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9.19선언을 이끌어내고, 이제 잘 가는가 했니 BDA 사건이 불거져서 다시 미사일 발사, 핵실험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입니다.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이 미국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비난하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몰아만 붙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지요.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협상할 때 항상 쓰는 전략이론으로 당근과 채찍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채찍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대화론이 아니고, 판이 깨지는 강경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평화를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채찍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강하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자.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것은 안전보장, 관계 정

상화, 경제 지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핵문제는 그때그때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황이 아주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 구도는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북핵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양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미국이 5년 동안 한반도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강한 압력의 행사,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손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풀려나간 서너 가지 요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도 분명히 사태 해결에 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그냥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은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냉전의 대치로 바뀌긴 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대결구도가 결국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 대결적 질서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통합을 이야기할 땐 항상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나가야 됩니다.

[top]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저한테 가끔 ‘왜 자꾸 친미 하나?’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소, 친일 다 해야 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친일은 아니지만,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북핵문제고,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와 신뢰를 갖도록, 설득하고 양쪽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권고와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작은 지렛대를 조금은 쓸 수는 있지만, 결정적 지렛대는 없거든요.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 당시에든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만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를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미 간의 관계가 서로 등을 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변화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파병은 아주 효율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 보수진영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전투병으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예를 들면 ‘1만 명은 보내야 한다. 1,000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결국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결국 3,000명, 전투병인데 비전투 임무로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그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갈 때마다 자이툰 부대가 정서적으로 큰 지렛대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병행해 갈 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현안이 됐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우호관계 역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환수를 추진하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환멸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도 전작권 환수처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언했던 것인데 참여정부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때 아주 중대한 과제 하나가 비자연제였습니다. 비자연제 문제도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FTA 협상도 타결시켰습니다. 주한미대사관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걸려있던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물어놔다 다시 재발하고, 물어놔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한미관계의 쟁점이 되고, 국내의 정치쟁점이 되고 옥신각신했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갈등의 소재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top]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대통령의 ‘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통령의 말을 연습해두는 건데 워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서 잘 못 앉아 있고 말을 위엄 있게, 행동을 기품 있게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은 승복하지 않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요.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팔메 수상은 스웨덴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케네디처럼 유명한데 그 사람이 86년경 경호를 해제하고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메 수상처럼 자유롭게, 보통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런 희망을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참여정부가 뭐했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제가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지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 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top]

■ 40년의 설거지 -목은 과제 해결

새 시대 말형이나, 구 시대 막내나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밥 상위에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제들의 설거지를 다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 비유를 들어 ‘설거지 정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방폐장 문제만 해도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매번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 전력의 40%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이고, 그 동안에 여러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우리 언론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못했던 과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과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돈이 드니까 반대하고 이해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행정수도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이지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때로는 여론이 마다하는 일, 시끄러운 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엔 거기 다 찍어주고,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니까 민정 참여하는 헌법에 다 찍어주고 하던 것이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눈높이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4.19에 있었고,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에 있습니다.

그 시기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대신해 역사의 눈높이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top]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돌이켜보면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지역정당을 벗어나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당위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동기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가 후보일 때 외부의 다른 후보와 내통하고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 개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 4분의 3이 적대세력이었으니까, 탄핵발의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top]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한나라당과 언론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แย่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얻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 놓았고 참여정부가 그 뒤를 이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경제파탄이 유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주식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주식 가격은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들인다.’ 매일같이 경제파탄을 주장하는 한글신문 보는 사람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영자신문 보는 외국투자자만 엄청 돈을 벌어난 것입니다.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경제는 심리입니다. 언론과 한나라당이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전혀 책임없이 보도하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몇 퍼센트 늘어나고, 수출이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 불안해진 일반 직장인들의 문제를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70년대, 80년대애나 어울릴 법한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국민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매년 10센티씩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센티씩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성장률도 OECD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실제로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국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경제가 이룩하는 단계에서 독재자가 한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론적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지금 한국경제는 체력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기술수준도 지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체력도 있고 기술수준도 이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top]

■ 민생, 그리고 양극화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모두 부닥쳐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초반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당시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근본 뿌리는 IMF 위기에 있습니다.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 성장률이 3.8%로 폭 가라앉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니다. 못 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서 2002년에 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들 월급이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는 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과 신입사원의 차이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앞위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문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양극화가 심화됐을 텐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도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졌고, 우리나라엔 복지 과잉은 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중산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끌어 올리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그 시스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외환위기로 한 번 더 었어버렸습니다.

복지냐, 성장이나...낮은 시대의 논쟁

‘복지냐 성장이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나’ 갖고 논쟁합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나’ 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 는 것입니다. 그건 가혹한 평가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 올렸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제

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비전 2030은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top]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2005년도 하도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출렁거리고 해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상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이 제도는 그동안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 매번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적당히도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지요.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top]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일찍 뛰어 들면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한미 FTA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top]

■ 위험한 도전, 그리고 불편한 진실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아냈던 그 비판을 국민들이 절반만 신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전달한 것을 국민들이 절반만 믿는다면 이 대통령은 쫓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 “스탠드로 올라가시오”

‘언론이 국가권력이나, 시장권력이나, 시민권력이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합니다. 권력 혹은 권력 대안과 결탁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부정 선수가 돼 있는 겁니다. 부정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일부 언론은 내내 갈등을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라는 애 겁니다.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수혜집단이 언론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언론도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거처럼 그대로 하면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재관행 개선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착과 특권의 문제와 다 결함돼 있습니다. 일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을 개혁하자, 가판 구독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취재를 위한 접촉을 할 땐 원칙과 절차를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언론과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언론에 대해 요령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지금도 계속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할 수 없었는가. 그런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만 언론 문제는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만일 제가 안 싸우면 언론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 주겠습니까? 그들은 정치 투사들입니다.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 뒀겠어요?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 맞는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 귀여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참여정부가 무너졌을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는 뜻이지요.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정말 제가 그때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토론의 공간은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언론들이 작당해서 덮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론도 ‘다 해야 된다. 2007년 상반기가 적기다’라고 사설까지 썼는데 막상 개헌을 2007년 초에 제기하자 전부 논의를 중단하자며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이것은 대선 블랙홀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용이라고 몰아부치듯이 이 역시 대선용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주제를 내놔는데 왜 토론 자체를 거부하나 말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뭐니까.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약속대로 개헌 공약을 내놔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옛날 민주주의 운동할 때, 시민으로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할 때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과 별 다를 것 없는 좌절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top]

■ 참여정부 평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생파탄, 민생파탄’ 얘기 하다가 ‘경제위기, 경제위기’ 하다가 ‘경제파탄, 경제파탄’ 하다가 요새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경제에 관해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상 경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살은 놈은 어찌 살리노’, 혼자서 묻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지난 10년간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회주의 정치, 불신의 정치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87년 이후 2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특권과 유착의 구조는 해소된 것 같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원칙도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고, 권력과 권력의 결탁이나 권위주의 문제도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top]

■ 남겨진 이야기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치 영역에서 불신, 기회주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화와 타협 부문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연정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해 나가는, 대화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공작이나 고도의 술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보고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나? 너 마 음대로 넘겨 줄거냐?’, 말하자면 패착이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한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적인 법치주의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 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결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초보 수준도 아니고, 거의 부재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아무 발전이 없는 수준이지요.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통합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획일주의 정치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타협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 저당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 아주 제가 신경질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계약을 해 놓고도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지 뒤통사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흥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 했을 때,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흥분해야 하고,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지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 자각을 가지고 역사적 과제를 맞닥뜨려 풀기 위해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숨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내가 임자다’라고 숨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핵심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오염된 찌꺼기들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주체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흐름 만들어야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사발전을 위한 그 사회 제도와 문화의 개혁은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 이윤곡은 심만양병설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퍼센트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전략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갖는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 | 등록일 : 2007.11.11

제목: 정부는 민생법안을 외치기에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무조건 민생법안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실생활과 괴리가 없는 현실성있는 법을 제정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꼭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가끔 관보에 실린 입법예고 법안들을 보면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법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과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법들도 많아 매우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심사할때 이런 점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FTA 시대, 우리의 농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돈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요. FTA를 이기는 방법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또 농지의 대용화방안이지요.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대용해 경제력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농기술의 극대화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농토를 새로운 목적의 토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도 그걸 적극 뒷받침해야 하구요. 농업부문 지원에 대해 말씀하셔서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제목: [교육]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하여...

기회균등할당제라... 취지는 매우 좋네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교육개혁을 소화해 내기엔 그 제도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 너무 허술해 보이는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교육당국자님 시험위주의 교육을 철폐하고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하려면 이런 제도가 전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선발방식이 시험과 다르다면은요. _ _

제목: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미진이 있어왔고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나라전체가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도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반이 마구 흔들리는데 견터널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목: 우리 사회에는 '정직'의 가치가 없다.

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TV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직'이라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컴퓨팅 생활에서의 해킹도 그렇고 국제청장 수뢰사건도 그렇고 BBK 사건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를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컴퓨팅 생활을 보자. 그 유명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카와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수십번 했지만 결정적으로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을 정확히 그쪽에서 알고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습니다"란 메시지를 띄우고 게임을 종료시키더라는 것이다. 몇번이고 그런 타이밍에 꼭 그 메시지를 띄우며 게임을 종료시키는 카트라이더가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중간에 잘 되던 게임이 꼭 종료할 시점에 사용자의 정상적인 종료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가 감시하는 것처럼 시점을 정확히 알고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인지 그점이 신기했다. -난 매번 그때 조카에게 "게임 그만해야지"란 말을 하였었다.

그래서 결국 한가지를 생각해 내었다. 내 책상에 사운드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헤드셋의 마이크가 결정적으로 떠올랐다. 그게 왜 결정적이고 하면 게임을 실행하는 코드에 얼마든지 마이크의 소리를 잡아내어 인터넷망 전송을 통해 운영자나 기타 유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첫번째 의심이 갔다.

마이크를 뺐어버린뒤 그런 일들이 결국 없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넥슨에서 우리집 조카가 아이템을 구경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걸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조사'라고 해야하나? 어쨌든 난 넥슨의 이런 행태에 정내미가 떨어졌다. 물론 또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건 O/S차원의 해킹이 있어서 마이크단자와 인터넷망을 통해 누군가(높은 차원의 또다른 해커) 책상에서 들리는 소리나 윈도우상의 이벤트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는 그 타이밍에 네트워크 연결을 끊었을 수 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독자들은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산통합(SI)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이 얘기들을 하니깐 그것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하니 좀 더 충분한 도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세상의 이치는 증거만으로만 판단하는게 아니다. 다 드러나

는 정황이 내막을 잘 설명해 준다.

컴퓨팅 생활에서 또하나의 정직이 실추된 사례는 수많은 유료 스파이웨어 프로그램들이다. 카페 등을 돌다가 잘못하여 엉뚱한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깔린 스파이웨어 진단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수많은 악성코드들을 컴퓨터에 심어놓는다. 그레놓고는 악성코드들을 잡으라고 돈을 요구한다.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도 부산청장이 세무조사무마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상급의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의 댓가로 거액을 상납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공직계의 불운물인 뇌물고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뻔뻔스럽게 그런일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았던가? 참여정부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조금 변했을뿐 아직 이런걸 완벽하게 막아내는 조직운영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다.

BBK 사건의 이명박 후보도 LK이뱅크와의 연관성을 놓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후보의 이미지로 굳어가고 있다. 방송은 한술 더 떠 그놈의 표본오차 몇% 운운하면서 후보의 도덕성은 대통령의 자질에 상관이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떠들어대기에 바쁘다. 그렇다면 과연 '대운하 건설'이라는 허무맹랑한 공약이 과연 자질있는 대통령의 공약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나와 상관없는 대통령 선거에 내가 이래라저래라할 입장은 아니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워서 한마디 해보았다. -대선에 관한 글을 안쓰려고 극구 다짐했지만 결국 3건의 글을 쓰고 말았다.

'정직' 과연 이걸 실천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근접한 흉내라도 내야되지 않을까?

<추신>

컴퓨터 해킹은 윈도우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아까 필자가 O/S 해킹이라고 했는데 O/S 차원의 해킹은 보이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검출해 내기도 어렵다.

<덧글>

한글계약서는 주가조작혐의를 받고있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씨라는걸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하네요. 근데 친필서명이 빠진게 석연치 않네요. 보통 중요한 계약서 쓸땐 이름을 그냥 글쓰듯 쓰는 서명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잖아요.

제목: 마을버스 문제

마을버스 그게 예전에 업체가 하나더 들어왔었는데 기존 업체와 맨날 싸우면서 요금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다가 배차간격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결국은 들어왔던 업체가 소송에 저서 퇴출되고 말았죠. 전 그 놈의 업자들 배차간격 때문에 예전부터 신사리까지 걸어다닙니다. 물론 급한 일에는 어쩔수 없이 마을버스 타고 다니지만 좀 낄낄하다 싶으면 20분 빨리 집을 나서 운동도 할겸 거기까지 걸어다닙니다. 단지내 공해에다 마을버스가 필요악이 돼 버렸지만 업체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연장노선사태까지 벌어진거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억울한 일이죠. 구청에 배차간격을 늘려달라거나 연장노선을 취소해 달라고 적극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지만 마을버스로 매일 출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걸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주민의 발을 불모로 배짱영업을 하는 업주도 문제구요.

제목: UN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5원칙

UN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5원칙을 보면 "차별금지의 원칙"이라고 종교, 인종, 정치적견해 등을 이유로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통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한 법적인 강구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지금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이 후보님, 국민은 누X꾼이 아닙니다.

제가 2007년 11월 29일 현재 지금까지 다음칼럼과 엠파스 블로그, 하나포스 및 천리안 게시판, 제 사이트(<http://run.blrun.net/>)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편집하면서 중복되는 글들도 약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은 "누X꾼" 이 아니라는 사실, 이 후보님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으시면 전 이 후보님 절대 찍지 않을 겁니다. 네티즌과 누X꾼에 대해서는 제 사이트나 첨부한 파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불합리와 싸우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호시탐탐 국민들을 감시하는 정부와도 싸워야 하고 개인적인 기술도 많이 요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게 한편으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됩니다.

모두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맞어 html문서는 나모같은 html편집기로 보시는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속에 여러 음악파일들이 링크 되어 있어서 ESC키를 누르면 소리가 꺼지긴 하지만 나머지 문장이 로딩이 안돼요. 텍스트 문서는 제거 게시판 등에 올릴때 미리 캡처해 놓은 것들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보시겠지만 이 사람은 Negative다란 단순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냉철한 비판의식으로 글들을 음미해 보시면 그래도 곳곳에 숙고한 흔적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http://run.blrun.net/>

제목: 문국현 후보...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관찮은데요? 홈페이지 디자인도 이명박후보보다 낫고 갖출건 다 갖추었네요. 전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그놈의 "누X꾼" 이란 전략적 용어를 과연 후보가 쓰는지 찾아볼랍니다. 투표일까지 잘 지켜보면서 누가 국민을 매도하지 않고 정직한 정치,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볼랍니다. 인물이 없으면 투표 안할려구요. ^^;

<!--여기부터 칼럼 내용 시작입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 대변 누X꾼 논평

여러분 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에 대한 언론의 자유 논평" 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국민들을 누X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네티즌에 대한 네트워크 권력을 약화시켜 인터넷논객을 비롯한 인터넷 개인미디어 및 네티즌 커뮤니티를 약화시켜보겠다는 정치세력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티즌은 인터넷논객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민 모두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책략적이고 전략적인 미디어정책과 선거전이 동원되는데 왜 내가 무거운 걸음을 해야합니까? --_--

http://run.blrun.net/
<!--여기까지 칼럼 내용 끝입니다. -->

<댓글>

별도의 칼럼으로도 썼지만 제가 방송사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누X꾼이라는 용어를 쓰지말라고 몇번을 욕을 하면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접 악질인 SBS방송국을 어렵게 찾아갔죠. 그것도 사전에 보도국 직원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현관 데스크에서 그 직원을 부르니 나오지를 않고 전화연결이 안돼 만나지도 못하고 방송국 입구까지 끌려나와 추위에 떨며 기다리다가 경비를 서고 있는 직원들에게 왜 네티즌 놔두고 누X꾼 자꾸 쓰냐며 고향을 치니까 그들이 지네들 잡으러(?) 온줄 알고 직원과의 통화를 몇번 시도하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선 경찰을 부르더군요. 경찰이 오자 제가 점잖게 자초지정을 자세히 얘기하고 약속을 하였으니 직원을 불러달라고 했죠. 근데 경찰이 경비직원들과 쑥덕쑥덕하더니 저보고 만나기 싫다는 사람을 왜 자꾸 만나려고 하나며 가라더군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였지요. 결국 경찰과 말이 통하지 않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것 같아 방송국과 경찰이 이런데였구나 절감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뺐습니다. 근데 기분이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드럽더군요. 이 글을 쓰니 예전일이 생각나네요. 참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누X꾼" 호칭은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네티즌" 에 대한 종합적인 정체성을 자기네 입맛대로 폄훼시켜보자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제목: 그냥넘보님의 누X꾼 댓글에 대한 답글

삼성산뜨란채 해당게시글

그냥넘보님은 제가 쓴 글(지난 카페글)을 안 읽어보셨나부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네요. 왜 그들이 멀쩡한 "네티즌" 이란 용어를 놔두고 "누X꾼" 이란 말을 만들었을까 그걸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칼럼" 이나 "블로그" "UCC" 는 그대로 외래어로 부르면서 너무나도 우리말로 순화돼 버린 네티즌을 "꾼" 이란 말로 폄훼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건 위(?-누굴까요)에서 누가 국어문화연구원에 "네티즌" 을 다른 "말" 로 순화시키라고 지시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설령 누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네티즌" 세력을 반대하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지극히 전략적인 용어란 겁니다. 네티즌(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민)이란 새로운 시대의 권력(정보화 시대의 권력이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몇개의 용어로 압축한 다음 그중에 골라 멋대로 부르게 된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X꾼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걸(누X꾼) 만들어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중의 하나일 겁니다.

올릴 문서4.txt

저같은 부류의 네티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런 이념과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과 싸워 나가는데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나하면.. 이런 네티즌들의 여러가지 사이버활동으로 기득권자들의 입장이 많이 손상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들의 활동은 순전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두가 잘되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조차하여왔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 또한 손해자들이란 얘기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너무 개혁적이라는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상황이 이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숨은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노력을 일거에 "꾼"으로 매도하는 작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그냥넘보넘도 제 지난 카페글이나 업로드파일 안의 안티누X꾼 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정이 약간 실려서 그렇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할말은 다 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목: 카페에서 정치이야기 하지 맙시다. 댓글

yngpak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오나 우리아파트에 관한 일 못지 않게 세상돌아가는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모여 우리 동네가 되고 우리 동네가 모여 우리나라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선거철에 제 생각을 주저리 늘어놓았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목: 국회도 정신차려야 한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국회의 참여광장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이란 것이 국회입법조사관들이나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람만 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민원을 넣고 조사관과 통화해 보았는데요 진정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진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습니다. 진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청원이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건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통상적으로 공무원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을 보면 통상적으로 7일이내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진정에도 한달이상이 걸려도 "처리중"으로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께 직접 청원을 해보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각 국회의원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김근태의원을 제외한 많은 수의 사무실 직원 및 당사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우리 국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목: 4월 총선,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 차지해야...

하나포스 해당뉴스

한나라당의 독주는 무슨 이유가 되었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총선은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물론 화합은 못되어도 합의를 할 여지는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견제세력이 없으면 끝이다 끝. 왜냐하면 정치인들을 마냥 믿고 맡기기에는 그들이 관여하는 잇권들이 너무 많다. 단적인 예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만 해도 그렇다. _ _ _